

25만원 지급·세제 지원...경제 공약 남발

‘5세 이상 무상교육’ vs ‘아동수당 18세 미만 확대’ 韓 “부가세 인하 확대”...李 “민생지원금 13조 투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사흘 앞두고 여야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은 부가 가치세 인하 확대 등 세제 완화, 5세부터 무상교육 등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야당은 13조원 규모 민생 회복지원금, 아동수당 지급 등을 제안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개편 등 주요 세제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간 정책 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여야의 공약 모두 재정 투입과 감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총선 이후 공약을 이행하려면 나라 곳곳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으로 7000억원을 들여 5세부터 무상보육 지원금을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우자인 아버지의 출산휴가를 한 달 유급으로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기존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60만원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연간 5일의 유급 자녀돌봄 휴가 신설,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의무화,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등록금 면제, 초등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생필품·육아용품 부가세 한시 인하 등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만 8세 미만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현금성 지원을 내걸었다. 여기에 모든 신혼 부부가 가구당 10년을 만기로 1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 감면한다고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아파트를 25만호 공급하고, 자녀 수에 따라 평수가 높은 분양권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여기에 예상되는 투입 재정은 23조 5000억원 가량이다.

여야 모두 저출생을 전담할 부서인 ‘인구부’(여), ‘인구위기 대응부’(야)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연합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에게 연간 44억5000억원을 들여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0~7세 아동은 월 50만원,

8~24세 청소년에게는 월 3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세 인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기존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10%)보다 2배 이상 낮은 세율(1.5~4.0%)이 적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조원을 투입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코로나 19 확산 당시 지급한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여야는 막대한 재정 투입을 기반으로 한 정책자금 확대, 소득공제 신설 등을 들고 있다. /뉴시스

“전남도, 의과대학 공모는 부적절”

민주연합 비례대표 “공모는 정치 논리, 지역갈등 커질 것” 우려

전남도가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공모를 통해 선정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지역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권 연대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연합 김윤 후보와 전종택 후보는 5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지역 공공 의과대학을 공모로 선정한다는 것은 정치적 논리로, 지역 통합보다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인 김 후보는 “전남 전체를 놓고 어느 규모의 병원이 필요한지 먼저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과 병원을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며 “전남 동·서부권 중 한 곳에만 병원이 들어서면 나머지 한 곳은 종전과 같이 의료 취약지로 남게 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공모를 의과대학으로 한정해 추진하면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이날 김 후보와 전 후보는 전남지역 맞춤형 의료공약도 제시했다.

서부권인 목포와 동부권인 순천·여수에 각각 700병상급 대학병원을 설립해 공공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지역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로 필수요료를 담당할 진료권을 선정하고, 지역의사제 100% 도입으로 지역병원 수련을 의무화한다는 방안이다.

대학병원 적자는 건강증진기금 중 약 2조원씩 10년 간, 총 20조원을 지역필수의료기금으로 전환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경우 전남에 연 800억원, 광주에 연 600억원의 지역필수요를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2배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김도기 기자

“조국혁신당, 소나무당 성과 가로채” 송영길 토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정권 심판 분위 전환에 공로가 크지만, 소나무당의 성과에 편승한 부분이 있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5일 송 대표가 정다운 소나무당 대변인에게 보낸 옥중 서신(4월 3일 작성)에는 구치소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치르는 착잡한 심경이 담겨있다.

송 대표는 “올해 2월 항소심 재판까지 아무 말 없고 눈치를 보다가 법정 불구속이 되자 윤석열 탄핵 선봉을 자처하는 조국(혁신)당 모습이 소나무당 헌신의 성과를 가로채 간 느낌이 든다”고 아쉬워했다.

구속 전부터 윤석열 정권과 검찰독재 심판을 주장해 온 송 대표의 주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지난 2월 항소심 선고 후 창당한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간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송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바람몰이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송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야권 파이를 키우고 윤석열 정권 심판 분위 전환에 공로는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도보수, 이대남파로 확장해 가보자”고 정 대변인을 독려했다.

송 대표는 지난 3일 제주 4·3 추도일이자, 보석 석방 기각에 따른 항의의 단식을 시작한 날 편지를 썼으며 지난 4일 오후 도착했다.

송 대표는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방송연설을 녹화했으며, KBS광주방송총국이 광주지역에 방송했다.

광주 서구갑에서는 송 대표의 아내 남영신씨와 딸, 아들이 남편·아버지를 대신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진실대행진’ 기자회견하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 ‘진실에 투표하세요’ 진실대행진에 나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5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표권 행사를 호소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 광주에서 사전투표... “진실 대행진”

“진실 규명 위한 투표...안전사회 위해 진실에 투표” 촉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광주를 찾아 ‘진실 규명을 위한 투표’를 촉구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와 시민대행회의는 이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참사 피해자들을 위해, 안전사회를 위해 진실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협은 “참사 발생 1년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떠오르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 우리는 제대로 된 답을 들

지 못했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우리의 외침은 거부권으로 돌아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시민들에게 진실에 투표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만기를 열어 ‘재난참사 피해자들을 위해, 안전사회를 위해 진실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이 심판이다. 투표를 통해 생명 안전 국회를 건설해야 한다”

며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우리 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의 염원을 담아 진실에 투표해 달라”고 했다.

회견을 마친 유가족들은 광주 동구 서남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로 이동해 투표하기도 했다.

앞서 유가족협과 시민대행회의는 각 지역 유권자들을 찾아가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규명·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표를 독려하는 ‘진실대행진’을 벌이고 있다.

전날 부산에서 시작한 이날 광주·전주·대전·수원을 거쳐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여섯 간의 일정이다. /뉴시스

총선 전 마지막 주말 ‘막판 스피드’ 유세

제3지대 개혁신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 등 표심 호소

제3지대 정당들은 4·10 총선을 나흘 앞둔 6일 전국을 돌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김종민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앞에서 열린 금태섭 후보 지원 유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의 80%가 갈등 구조에 빠져있다”며 “이걸 해결하려면 반드시 정치가 정상화돼야지 이렇게 해선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팬스유세단 ‘로운이들’과 함께 전국 각지를 누비며 표심 공략에 돌입했다.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설촌(부천을), 장덕천(부천병) 후보를 지원사격하며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지난 2년 동안 국회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과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정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냐”며 “정적을 바꿀 수 있는 건 유권자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호소했다.

오 위원장은 “이제 누군가가 저출생, 기후재난, 의료대란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중재해야 한다”며 “분노와 심판을 넘어 그 다음을 이야기 하는 새로운 정치,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시대를 잘못 읽으면 나라를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4월 10일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과거 기득권에 사로잡혀있는 정당이 아닌 개혁신당과 금태섭 후보에게 던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공동대표(광주 광산을)와 홍영표 후보(인천 부평을)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쌍암공원에서 ‘청년 특목 버스킹’을 통해 청년 유권자들을 만났고, 홍 후보는 자전거를 타고 시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금태섭 후보는 “지금처럼 막말이 판치고 서로 만나지도 않고 상대방을 친일파, 반국가 세력이라고 부르는 정치를 끝내겠다”며 “대한민국 정치의 균열을 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우리에게 민생도 시민의 삶도 변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조기종식’을 기치로 서울과 대전, 강릉을 찾아 유권자들을 만났다. 이날 생일을 맞은 조 대표는 사상 최고 투표율과 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생일 선물로 받고 싶다는 “국민 위에 거만하게 군림하려는 자들을 내치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뉴시스

‘샤이 보수’ ‘의정 갈등’ ‘2030 투표율’...막판 변수

“전체 투표율 보단 2030세대 투표율이 관건”

4·10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샤이 보수’ ‘의정 갈등’ ‘2030 투표율’ 등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공영훈·김준혁 후보의 각종 논란은 보수층 결집을 자극하고 중도층 민심을 이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불공정과 특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030세대의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의정 갈등은 고물가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과 더불어 ‘정권 심판론’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민주당 논란 3인방에 대한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막판 지지층

결집을 통해 격전지에서 판세를 뒤집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김준혁 후보가 성상남 의혹을 제기한 이화여대 인근에서 사전투표를 하며 여성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호소했다. 양문석·공영훈 후보의 편법 대출·아빠 찬스 논란도 부동산과 공정에 민감한 중도층과 2030세대 표심을 자극하는 변수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도덕적 우위를 지체해 온 민주당이 내놓은 후보들의 자질 논란과 관련 비판에 ‘무대응’하는 지도부의 행태는 해당 지역구는 물론 박빙 지역 판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라고 지적했다. 이들 이슈의 파장 수위에 따라 최대 20석까지 출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5일 “양문석·공영훈·김준혁 파동이 미풍으로 끝날지, 태풍이 될지가 남은 변수”라며 “판세는 이미 굳어졌다. 전체 판세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접전 지역에는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특히) 양문석은 범죄에 가깝다. 청년 정서에 안 맞다. 가시적인 것이 나오면 청년들이 분노할 수도 있다”고 했다.

최홍태 리얼미터 선임연구원은 “막판 변수는 양문석·공영훈·김준혁 논란이다. 편법 대출, 아빠 찬스, 성상남 발언은 후보자 도덕성, 자질

문제와 엮일 수 있다”며 “총선 막바지에 잡음 또는 자질 논란이 빚어진 건 민주당이다. 정당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 갈등도 막판 변수로 꼽힌다. 최 선임연구원은 “의정 갈등도 변수다. 정부의 리스크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불신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정부 여당한테는 (남아 있는) 좋은 변수는 별로 없다”며 “(통상) 외교관계, 정책, 현안 등으로 변수를 만드는 건 대통령, 정부여당인데 (의정)갈등 대응 등을 보면 하나마나한 말을 한다. 역량이 소진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의대 정원 이슈는 아직 남아 있는 현안이다. 급격 타결 여부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총리 “450조 투입해 녹색경쟁력 강화”

“경제규모 1.4배·탄소배출 같아...그만큼 감축”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2022~2023년 한국 탄소배출량이 2010년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고 “정부는 ‘탄소중립 100대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450조원을 이상을 투입해 대한민국 산업과 사회 전반의 녹색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 2022년보다 더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2010년보다 경제규모는 1.4배가 됐는데 탄소배출량이 같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모든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기 상황에서 시민의 노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줄어 들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가운 보고를 받았다. 2022년과 2023년 우리나라 탄소배출량이 크게 줄어 들어 2010년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한다”고 적었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이날 2018~2023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전원별 발전량, 주요 업종 제품 생산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추산 중인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은 2022년보다 더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2010년보다 경제규모는 1.4배가 됐는데 탄소배출량이 같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모든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기 상황에서 시민의 노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줄어 들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대책들 대신 실현과 실천이 가능한 대책을 내놓고 시민이 하나씩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며 원전산업 정상화, 신재생에너지 비율 재조정 정책을 열거했다.

한 총리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며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겠다”고 했다.